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월 29일(통권50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2018 정책 환경과 사회 활력 복원 과제 - 청년이 꿈꾸는 시대를 만들자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목 차

1. 2018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
2. 평창올림픽 이후를 대비하자.
3. 시대는 새로움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수준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2018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

2018년 벽두, 대한민국은 길을 잃은 듯하다. 다른 나라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동계올림픽 개최로 잠깐 멈추어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이 오히려 남북한 단일팀이라는 마술에 걸려 길을 잃어버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3수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그래서 훌륭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국민 모두 성원을 보냈다.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참가가 거론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민의 축제에서 정치행사로 변질되었다. 북한은 이번 동계올림픽에 총 5개 동계종목 및 46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지만 예술단과 응원단은 이보다 훨씬 많은 370명을 보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비정상 규모이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개·폐회식을 결정했다. 지난 4년간 팜 흔들며 쟁취한 선수들의 출전자격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2030세대들의 연

민의 마음, 여기에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북한 선수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북한 선수단에 비해서 예술과 응원단의 도 넘는 인원수와 이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 전날 열병식을 한다. 예술단 파견으로 앞에서는 평화 미소를 짓고 뒤에서는 군사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평화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에 베풀어주었지만 얻은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한다. 과거에도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긴장완화가 아니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폭 그리고 북핵의 완성과 미사일 실험이었다. 되돌아 온 것은 평화와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심화였고 핵과 미사일의 비대칭군사력을 앞세운 위협이었다.

2. 평창올림픽 이후를 대비하자.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동계올림픽으로 유발된 남북한 해빙무드는 단기에 끝날 것이다. 대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로 남북관계는 물론 6자 회담 당사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하면 긴장수위는 더 높아지고 대북제재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현재 유엔제재에 따라 외화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정부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위장된 평화공세와 함께 북미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관계 역시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세탁기, 태양광 셀과 모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우리도 WTO에 제소하겠지만 한미관계는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주변 국가와의 외교안보국방 관계 역시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한중관계도 별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유지로 나갈 것이다. 한일관계 역시 위안부 합의 이행여부 문제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문제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논쟁은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도, 법인세 인상과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의 후유증이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지지층과의 소통은 활발했으나 국민의 편에서 소통과 수용능력은 미약했다.

3. 시대는 새로움을 요구한다.

우리는 저 신뢰사회에 살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이다. 세대 간 불신도 심각하다. 젊은이는 기성세대를,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불신한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사회 어느 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정책신뢰도 낮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의나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정에서 2030세대들의 반응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발표 직후에 뒤집힌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재개 결정으로 번복되는가 하면 사드배치는 시간만 지체되고 원래대로 배치됐다. 유치원 영아수업 금지는 유아무야 되어버렸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강남 부동산 값이 치솟았다.

오늘날 우리는 활력을 상실한 채 살고 있다. 사회 어디를 봐도 활력이 넘치는 곳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짜증이 난다. 국민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변함이 없다. 정권을 잡은 쪽은 정권 잃은 쪽을 향해 비수를 날린다. 그러다보니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는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투자는 해도 국내 투자는 머뭇거리다.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와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역시 암울하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한 도전보다 포기과 좌절을 얘기한

다. 3포 세대, N포 세대, 헬조선 등의 용어가 이를 반증한다. 이래 가지고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무엇인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대는 새로움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대는 제도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젊은이들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갈 수 있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가려면 지난 1년 동안 전개했던 적폐청산 작업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은 버리고 대신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발전의 동력역할을 한 개인의 자유는 더욱 펼치게 하고 사회통합의 원리인 공동체주의는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바로 [공동체자유주의]를 미래의 지향가치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4.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수준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에 일구어 낸 쾌거로 세계 일곱 번째로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30-50 클럽' 국가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진국 규범에 맞는 사회제도와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법치와 도덕이 바로 선 사회 규범과 배려와 포용의 정신이 자율적으로 솟아나는 국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지식주도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개선(Upgrades)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전략과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개혁도 적극화해야 한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물론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복지정책도 바꾸어야 한다. 신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중인기 영합주의적인 무상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입김 축소와 자율·창의·다양성을 진작하면서 개방·공유·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국가재창조 수준의 대개혁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 지향가치로서 [공동체자유주의]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해왔다. 발전 동력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국민통합의 원리로서 공동체 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자유주의]는 시대의 문제인 과잉민주주의와 과소민주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진화와 통일, 국가전략과 함께 이에 부응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적시하면서 국민과 역사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시행할 것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201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사회전반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제시해나갈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젊은이들이 앞장 설 때 미래를 향해 제4차 산업혁명도 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포기과 좌절에서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